

(KIC중국, 2021.6.10)

□ 中, 외국인 투자자 중국 내 오락장소 설립 허가

중국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문화관광부 오락장소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인허가 사항 관련 통지>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합법적 중국 내 오락장소 설립을 허가하고, 외국인 투자 한도를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오락장소 운영을 신청할 경우, 성(省)급 문화관광 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료, 설립조건과 절차는 중국 투자자와 동일하다.(人民网, 2021.6.3.)

□ 中 “기원 추적은 정보 요원이 아닌 과학자에 의존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이 ‘실험실 유출설’을 재점화하고 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기원 추적 과정이 정치에 의해 오염됐다”면서 “모든 사람이 기원 추적이라는 과학의 문제를 정치와 분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왕 대변인은 “바이러스 기원 추적은 과학의 문제이므로 정치화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낙인을 찍고 바이러스에 꼬리표를 붙이는 언행과 기원 추적을 구실로 특정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 WHO 전문가의 기원 추적 연구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과학자가 아닌 정보 요원을 동원해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를 주도하도록 부추기는 언행을 끊임없이 보았다”며 “미국의 이런 기원 추적 정치화 행위는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협력을 심각하게 간섭·훼손하고, 각국이 코로나19와 싸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원 추적은 정보 요원이 아닌 과학자에 의존해야 하고, 대항을 부추기고 대립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연대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하며, 일부 국가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못박았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이미 두 번이나 WHO 전문가를 중국에 초청해 기원 조사에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원 추적 조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관계되므로 다른 나라도 중국처럼 WHO 전문가를 초청해 기원 조사를 진행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하게 답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등 소수 국가에 정치화를 즉각 중단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음모를 위해 국제 기원 조사 협력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人民网, 2021.6.1.)

□ 중국 ‘전자동 셀프약국’ 운영, 24시간 비대면 서비스

최근 중국항공총병원에서 연구·개발한 ‘전자동 셀프약국’이 정식 운영에 들어가 환자들에게 24시간, 비대면 셀프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 결제를 완료한 후 셀프 약 지급기 스캔구에 영수증 코드를 스캔하면 신속하게 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셀프 약 지급기에서 약 설명서 인쇄도 가능해 환자들에게 주의사항에 유의하도록 했고, 음성 안내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셀프 약 지급기는 알약과 물약뿐 아니라 주사약도 지급해 전과정 비대면 셀프 지급에 신속하고 정확도까지 높다. (人民网, 2021.6.7.)